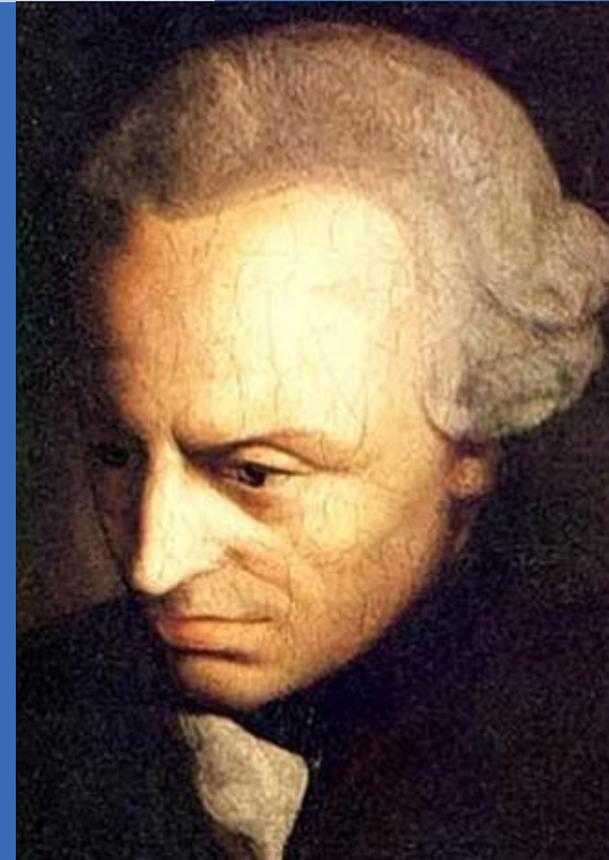


[2024년 4월 22일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이마누엘 칸트: 자유의 철학 정의,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치국가<sup>1)</sup>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글은 민경국 저 『국가란 무엇인가』(북앤피플 2018) pp. 143-181의 내용을 요약한 것.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칸트는 누구인가?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V. 법치국가와 국가의 과제

VI. 칸트 사상의 힘

# I. 왜 칸트인가?

## □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에인 랜드의 해석:

▶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이타주의자로 칸트를 해석.

▶ 파시즘의 선구자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간이라고까지 비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에인 랜드는 칸트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열에서 분리.  
그 결과, 자유주의자들이 칸트의 사상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음.

## □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칸트의 정치철학을 이용한 좌파

▶ 강력한 국가의 재분배 역할/ 서민층의 기회를 개선할 국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I. 왜 칸트인가?

## □ 정말로 그런가? 우리의 답변

- ▶ 자유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확립한 인물
  -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지지
  
- ▶ 칸트는 고전적 자유주의자
  - 정의,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치국가

## II. 칸트는 누구인가?

### □ 출생과 삶의 여정

- ▶ 칸트는 프러시아에서 태어남. 아버지는 말안장 수리공. 9남매 중 넷째.
- ▶ 대학에서 철학, 수학, 신학, 물리학 등을 공부, 뉴턴의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  
1755년 박사 학위를 받았음
- ▶ 15년 동안 시간강사 생활/ 수강생들이 지불할 의향에 따라 강사료를 받는 강사.  
강사들은 부업을 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려움.
- 칸트는 educational entrepreneur였음. 가르치는 기술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새로운 주제를 개발. 수강생들로 가득 찼음.

## II. 칸트는 누구인가?

### □ 인식론 대신에 윤리학에 더 큰 관심

- ▶ 1770년, 칸트는 교수직을 얻어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작업을 시작, 이게 1781년 『순수이성비판』. 인식론과 관련된 저서,
- ▶ 우리가 어떻게 외부의 현실에 관하여 알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즉 인식론의 문제는 칸트에게 제일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순전히 사변적인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의 중심된 관심은 윤리였음
- ▶ 칸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위해서만 인식론에 주목. 우리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도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어야 함.

## II. 칸트는 누구인가?

### □ 복잡한 현상(미제스)의 문제.

- ▶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관찰을 통해서 도덕을 배우는 것(실천적 인류학)도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어려운 일. 인과관계는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음. 이게 바로 "복잡한 현상의 문제:
- ▶ 어느 것이 결정적인지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
- ▶ 귀납적인 방법. 경험적 데이터의 분석은 윤리적 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
- ▶ 칸트에게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접근 방식-
  - 도덕에 대한 연구는 논리적 분석
  - 비모순률 법칙, 법칙이 가르치는 교훈은 정언명령.
- ▶ 정언명령을 통해 칸트가 제한된 정부와 최대한의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정언명령: 도덕적 논쟁에 대한 해결 방법

▶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하자.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약속은 늘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다. 그런 대답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답일까?

▶ 칸트는 그의 첫 번째 도덕 철학 저작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논기』에서 도덕적 논쟁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적 직관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다.

▶ 칸트는 이성(논리)의 관점에서 행동규칙을 찾는다. 필수적인 도구는 '비모순율(law of non-contradiction)'이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정언명령 1: 평등한 자유

*“보편적 법이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공준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 ‘보편적 법’이라는 보편성의 의미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자.  
즉, 내가 지금 취할 특정한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다고 해도 그런 행동이 어떤 부정적인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다. 비모순을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예1) 돈을 갚겠다고 거짓 약속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거짓 약속이 보편적 규칙이 된다면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순). 거짓 약속은 보편적 도덕이 될 수 없다.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
- ▶ 예2)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도둑질해도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런 행동준칙은 보편화할 수 없다. 훔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 행동원칙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 도덕적 의무를 산출하는 칸트의 절차는 특정한 행동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가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절차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예3) 한국 사람 대다수가 소득의 강제적 재분배를 찬성한다고 해도 그 관행은 결코 도덕적일 수 없음. 왜?: 분배는 생산에서 소비를 분리하는 원칙.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틀렸음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를 지지하는 준칙은 '비모순의 법칙'에 대한 위반.
- ▶ 예 4) 공로원칙에 대한 반대: 노력을 많이 할수록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경우 이것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불가능. 비모순율 위반.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정언명령 II: 존엄성

▶ 물건은 존엄성이 없다. 물건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수단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인간의 존엄성 때문.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스스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 그런 존재는 목적 자체로도 취급해야 함.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큼 목적으로도 대하라”라는 두 번째 정언명령 공식:

▶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야 한다는 준칙을 보편화한다면 누구나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합리적 정신은 다른 합리적 정신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집착. 그러면 사회는 해체된다. (모순).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내가 수단으로 취급한 사람에게 공손함 또는 존경심을 그 대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장의 자발적 교환에서처럼 합의를 통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예 1) '나는 점심에 옆집 식당을 이용한다. 그 이용에서 식당주인이나 그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한다. 예의바르게 공손히 그들을 대우한다. 그리고 메뉴에 기록된 조건으로 돈과 교환한다. 나는 나의 식당주인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속이지도 강제하지도 않는다.'

▶ 예 2) 인간을 오로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예는 강제 거짓 강요 폭력. 그러나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버는데 그 대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공. 그래서 시장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사회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예3) 재분배의 부도덕성.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 복지국가가 부도덕한 이유도 동일한 가치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수혜자가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

- 특수 계층이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정책,
-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부도덕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을 수단으로만 취급하기 때문.

▶ 정언명령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는 우리는 타인을 오로지 그의 목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 인물이 여류자유주의자 애인 랜드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가언명령과 정언명령:

▶ 정언명령은 시간 장소 사람에 불문하고 예외 없이 적용. 또는 이익이나 개인의 행동목표·동기 또는 의도와도 독립적.

▶ 가언명령: 살인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살인해도 된다. '네 손이 불에 데기를 원하지 않으면 뜨거운 난로를 피해라', '형무소에 가기 싫으면 살인하지 말라.' '최선의 방책은 정직이다' 등.

## □ 정언명령은 행동규칙이 정의롭기 위한 조건(하이에크)

▶ 행동규칙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끼리의 외적 행동관계에 적용.  
-한 사람의 희망이나 욕망과 같은 내적인 것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행동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적용에서 차별이 없다.)
- ▶ 시간과 장소 인적 특수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이런 특성을 가진 규칙은 대부분 특정한 행동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규칙.
- ▶ 도덕원리에 따른 행동규칙은 개인의 자유, 존엄성,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가치들을 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상을 의미하는 법의 지배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정언명령은 정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로지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소극적인 테스트다.
- ▶ 주목할 점은 정언명령은 도덕규칙의 적극적인 내용을 도출할 연역 과정의 전제로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칸트의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특성).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 정언명령은 법다운 법이 될 조건: 법치국가적 법

- ▶ 일반적 도덕 원칙으로서 정언명령은 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도덕철학적 개념인 정언명령을 적용한 것이 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 ▶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법의 지배”라는 법철학적 개념을 일반윤리학으로 재해석한 것이 정언명령.
- ▶ 법의 지배: 법다운 법이 될 수 있는 조건
  - 보편성: 법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입법은 모든 인간은 똑 같이 존엄성이 있다는 도덕적 가치의 위반이다.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탈 목적성: 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의 위반이다. 시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법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 특정한 행동을 당연히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무론적 윤리의 특성이다. 이 같은 법 원칙을 기존의 법 시스템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경제학에 해박한 칸트: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은둔한 철학자가 아니었음.

▶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흄 등,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의 문헌을 두루 섭렵하여 기업과 시장에 박식했음..

▶ 만년에 칸트는 거의 매일 오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대부분은 사업가. 상인. 은행가였다는 것이 역사가의 증언. 화제: 경제와 정치

▶ 친구들의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돈도 벌었고 유산으로 상당한 재산도 남겼다.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 시장은 목표의 왕국

▶ 좌파는 칸트의 정언명령 두 번째를 들어 자본주의는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체제라고 비판. 노동자를 자본가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체제: 자본주의.

▶ 좌파의 비판은 정언명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시장참여자들은 사기나 강압이 없이 고객들의 목적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 시장은 수많은 목표의 추구가 가능한 체제. 시장은 다목적 시스템. 시장은 모든 사람이 타인들을 목표로 여기는 장소. 그래서 시장은 목표의 왕국.

*“목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든지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에게 필요와 관련된 것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칸트는 자유의 도덕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존엄성이 구현된 것이 바로 시장경제라고 이해했다. 이성적인 존재가 목적 자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제도가 시장이라는 것

예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잔디를 깎을 때—사람은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잔디 깎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제안을 하고 그가 자신의 합리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잔디를 깎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를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 시장은 '자연의 감춰진 계획'에 따라 작동한다.

▶ "세계시민의 시각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을 9가지 명제로 설명하는데, 그 명제들 가운데 8번째 명제에서 인류 역사를 "자연의 숨겨진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

"개인들은 (중략) 자신들의 성향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모순되는 그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각 개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에 의해 의도된 진로를 따라 인도되어 그들이 설사 알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을 목적을 무의도적으로 달성한다."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시장역사의 진로가 가져다주는 유익한 결과는 자연의 감춰진 목적으로 여긴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해당된다. 그 원리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의 예:

“따라서 산물이 최대의 가치가 되도록 개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사회의 연간 수익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실제로는 그들은 공익을 증진할 의도도 없고 어떻게 증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목적을 증진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자연의 보이지 않는 기획”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거래의 자생적 질서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이성을 통해서 인정된 법 시스템이 생겨난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성향이 혼합한 된 것, 즉, “반사회적 사회성”이 인간의 본성 그런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안정된 이유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기획”을 통한 본성의 통제 때문이다.

▶ 주체의 자율성을 위해 공적 영역을 최소화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 자연의 감춰진 계획을 통해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통제하여 안정된 사회가 확립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임.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 시장질서와 자유경쟁

▶ 경쟁이 없이는 인간은 “나태함과 수동적 만족감”에 빠짐. 경쟁이 없이는 “모든 탁월한 자연적 소질의 개발”도 없음.. 따라서 인류의 번영은 주로 사회 속에서 인간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쟁의 무의도적 결과. 경쟁과 대립은 문화의 개발과 도덕적 완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칸트의 믿음

▶ 경쟁은 역사철학적으로 볼 때 이성의 발전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관점이 가능한 이유는 경쟁 속에서 질서가 가능하기 때문. 경쟁의 자유가 유지되는 한 “자동화가 스스로 유지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스스로 유지됨 경쟁의 자유가 제한되면 시장의 안정성과 질서가 방해되고 혼란이 야기될 뿐.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면, 기업은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행복추구의 자유를 제한하면 전체 사회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 칸트의 믿음.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을 연상시키는 대목). 규제를 통한 자유의 제한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서민층을 비롯하여 보편적 번영을 지체시킨다는 것이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의 핵심 내용.

▶ “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한데 자유 없이는 부를 생산할 활동이 번창할 수 없다”고 주장. 자유무역은 전쟁을 극복하고 모든 나라의 이득을 증진. 자유무역은 세계평화를 창출(영구평화론)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 시장질서와 법질서의 상호의존성

▶ 법질서와 경제질서의 엄격한 구분; 그 두 가지 질서는 상호의존적. 시장을 지배자가 없는 계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질서라고 보았음.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인식은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 법치국가는 시장질서를, 시장질서는 법치국가를 전제.

▶ 칸트에게 경제질서는 법이 침투할 대상이 아니었다(공리주의와 비교). 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법이 뒷받침을 할 뿐. 그런 뒷받침만 하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로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인과 그룹의 경제활동이 방해받아서 안 됨.

## V. 법치국가와 국가의 과제

### □ 권리의 상호인정을 확립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역할

- ▶ 법과 법치국가의 역할에 관한 칸트의 생각: 법과 법치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보호됨. 자연상태에서의 권리는 불완전하고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 ▶ 법치국가에서 비로소 권리의 법적 성격이 확립. 그래서 국가의 존재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

### □ 법치국가의 중심과제는 시민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 ▶ 공권력의 행사가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 법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된 국가가 법치국가다.

## V. 법치국가와 국가의 과제

- ▶ 의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전부 법일 수는 없고 주권적 국민이 원한다고 다 법이 아니다. 법은 “보편화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시민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차별이 없이 당연히 금지하는 내용의 법.
- ▶ 법치국가의 중심과제는 법치 국가적 법원칙을 통해서 자유·시민권을 보호하는 일. 칸트는 귀족의 특권과 노예제의 폐지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법원칙 때문. 특권과 차별은 법치국가이념과 합치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득수준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불리하게 하는 것은 법의 보편화와 충돌

## V. 법치국가와 국가의 과제

### □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국가는 독재를 부른다.

- ▶ 칸트는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국가의 선행의무를 강력하게 부정. 국가는 정의로울 수 있지만 자선적일 수 없다는 것
- ▶ 정부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가장 큰 독재.
- ▶ 선행은 도덕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법 영역에 속하는 것은 시민들이 타인들의 인격, 소유를 침해하는 불의의 행동.
- ▶ 정의로운 국가는 시민들의 삶을 가장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 법 원칙만 있을 뿐 행복의 원칙은 없음.

## VI. 칸트 사상의 힘

### ▣ 칸트의 업적

- ▶ 정언명령의 준칙은 실제로 법치의 근저에 있는 기본사상을 윤리학의 일반영역에 확장-자유로운 개인들을 인도하는 모든 규칙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개념은 법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
- ▶ 법치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

## VI. 칸트사상의 힘

### ▶ 칸트는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

-도덕의 영역을 법이 침해할 경우 이는 도덕의 타락, 부정부패, 개인의 존엄성 파괴를 불러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에서처럼 경제를 도덕화하려는 노력을 반대함.

### ▶ 경제와 윤리를 이원화한 것도 칸트의 공로(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 도덕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법과 권리의 권위를 훼손하고 준법정신을 흐리게 만듦.

-자유와 존엄성은 절대적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가격이 없음

# VI. 칸트 사상의 힘

## ▣ 자유사회의 실현

- ▶ 법 아래에서의 자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
- ▶ 국가나 사회의 권위에 예속하고 싶은 성향(parentalism)과 엘리트적 온정주의(paternalism)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몽과정이 필요.